



# 畜産開發에 농촌부흥과

쇠고기 값이 달이 다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해 늦가을경에 9백80원(6백g)하던 것이 새해들어 1천1백원으로, 다시 2월에는 어느새 1천 2백원으로 오르더니 3월 23일부터는 1천 4백원을 받아도 좋다고 당국은 허가를 했다. 불과 4개월 동안에 40%나 올랐으니 가히 파동이라할 수 있겠다. 하긴 파동이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어 온 것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사일처럼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문제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크게 파동칠 문제가기 때문이다. 값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또 언제 파동이 재발할지 모른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쇠고기 파동이 일어나는 하나의 계절병이었다. 농사철을 맞아 농사일에 소가 바빠지고, 따라서 농촌으로부터의 생우(生牛)의 공급이 줄어들어 자연 쇠고기값이 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농사철이 지나면 다시 생우의 공급은 늘어나게 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쇠고기파동은 이러한

朱

(建國大教授)

權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 농업구조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까지 연결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고 따라서 시급히 그 대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 消費生活의 變化

소득이 늘어나고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국민 식생활의 유형을 녹말식량으로부터 단백질, 지방질 그리고 비타민 식량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농업생산구조는 주곡(主穀) 농업으로부터 축산, 소채 과실 등의 농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녹말식량의 공급을 위한 주곡 농업은 저소득과 빈곤을 수반하는 농업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우리는 3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국민식생활은 급변하고 있다.

잡곡 주식으로부터 미곡주식으로 다시 계란, 우유, 육류, 소채, 과실 등의 대량소비시대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1975년말 현재로 국민소득이 5백달러선을 넘어섰다. 학자들이 규명한바에 의하면 답작(畓作) 농업국가에서 국민소득이 5백달러선을 넘어서면 쌀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일본의 예를 보면 1960년대에 논면적이 1백정보이상 감소하고 그대신 목야면적이 증가했다.

쌀의 한 사람당 소비량도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1965년~1974년의 10년 동안 농가의 작물별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주곡부문이 13.4% 감소된 반면 비타민 공급원인 과실, 소채류

부분이 2.3배에서 3.6배까지 증가하고 단백질 및 지방질원으로서의 축산부문이 8.5배로 급증했다. 또 가축마리수는 한우가 35%유우(乳牛)는 11배 육우(肉牛)는 9.3배 돼지는 13배 닭은 16배로 놀라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식량작물은 불과 4%증산에 그치고 축산업이 이같은 증가를 보였지만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은 못되었다.

특히 한우의 경우 15년 전인 60년말에 1백만 9천마리였는데 작년말엔 1백 55만 2천마리로 54%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쇠고기 소비량은 한우사육의 증가율보다 10배나 되는 5백 40%나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쇠고기의 소비량이 70만 3천 t으로 재작년에 비해 44.7%나 늘어났다. 마리수로는 재작년의 32만 5천마리보다 14만 5천마리가 더 많은 47만 마리를 잡아 먹었다. 그러니 소의 수가 줄고, 다시 말해 수요에 비해 공급의 부족율이 날로 높아져 쇠고기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왜 供給이 달라나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왜 공급이 이를 당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수요공급」이라는 경제학의 초보적이자 평범한 원리가 적용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해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등위가 이른바 「저물가정책」에 억압 당하는데 원인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원리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파동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사람들이 쇠고기를 먹는만큼 농민들이 소를

기르지 않는 현상, 다시말해 수요-공급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것은, 그것도 날이 갈수록 그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한마디로 말해 쇠고기값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값이 싸니까 사람들은 많이 먹으려고 하고, 싸니까 농민들은 소를 기르지 않으려 한다.

과거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소가 필요조건이었다. 소없이 농사짓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

경작의 방법이 많이 달라졌다.

리어카가 보급 되고 경운기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소가 해야했던 논갈이 밭갈이를 경운기가 대신하고 있다.

소의 기능이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은 소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농민들은 소를 농사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소를 키움으로써 얼마만큼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느냐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수익이 시원찮으면 소를 기르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다 정부는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물가억제의 안전판으로 소값을 억누른다. 소값이 싸기 때문에 생산과 공급이 줄고 그리고 쇠고기 값이 오르려고 하면 싸게 억눌러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증가와 함께 커지는 쇠고기 소비육구 등등은 파동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는데 자연스런 작동요인(作動要因)이 되는 것이다. 평범한 경제 현상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그만큼 상식적인데서 찾아진다.

쇠고기 값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상에서 형성되도록 버려두는 것이다.

정책은 어떤 부정행위나 조작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찰하고 배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長期的인 對策

쇠고기파동은 실상 한국인의 쇠고기에 대한 편향적기호도 한 요인으로 지적 할수 있다.

국민들이 쇠고기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육류가 생산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뜩이나 부족한 쇠고기가 바닥이 나는 것이다.

육류의 대량 소비국인 미국만 하더라도 쇠고기와 돼지 고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호가 비슷하고 가격도 역시 비슷하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쇠고기에 대한 기호를 하루 아침에 바꿀 수도 없고 또 말로서 될 일도 아니다. 경제원칙을 적용한 정책으로 대처해야 한다.

공급 농가의 이윤자극이 생산증가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물가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소 값의 억제는 소의 증식을 막았을 뿐 아니라 쇠고기와 대체될 수 있음직한 토끼, 오리, 양 따위의 다른 가축 사육을 어렵게 만들었다. 같은 값이면 본래부터 입에맞고 값도싼 쇠고기를 먹지 토끼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따위를 먹으려하지 않게 마련이다. 채산만 맞으면 무엇이든지 생산하려는 것이 부지런한 우리 농민들의 생각이다.

물론 쇠고기 값을 올리면 우선은 소비자가 불편하고 다른 물가에 파급 효과를 줄지 모르나 길게본다면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 山地開發에 박차를

우리의 땅은 60%가 산지다. 이 넓은 산지를 잘만 이용한다면 축산업은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최고기과동은 높고 있는 우리의 산야를 이용하는 축산업의 개발에 다시한번 눈을 크게 떠야할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스위스는 그 가파른 산야를 개발, 국토의 42%를 초지(草地)로 조성하고 있고 영국은 50.9%, 네덜란드는 36.8%, 오스트레일리아는 57%가 초지로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 국토의 0.6%(6만ha)가 겨우 초지로 형성되어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경사 40도가 넘는 산지까지 초지로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경사 31도 이하의 유향 상태에 있는 산지만 하더라도 1백 23만 ha나 된다.

물론 경사가 완만한 낮은 지역은 과수원 또는 밭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절반만 이용하면 축산은 지금보다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소뿐 아니라 다른 축산의 발전도 충분히 보장받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중요한 정책만 수립되면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정책만 마련되면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은 물론 축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 國民健康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근년들어 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육류소비량도 상당히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선진국의 수준과는 요원하다.

국제 식량농업기구 (FAO) 통계에 따르면 (74년) 우리 나라의 연간 축산물 소비량은 5.8kg인데 비해 미국은 1백 10kg, 유럽의 영국,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대충 50kg 안팎이다.

일본은 19kg, 필리핀은 13.1kg, 태국은 11kg으로 우리 나라보다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영양섭취가 순조로와야 한다는 것이다. 먼 앞날을 내다보고 국민영양공급내지 국민 체위향상을 위해서도 축산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고기과동을 일시적으로 수습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내일의 우리나라를 끌고 나갈 어린이들을 더 잘먹여야 한다.

국가 발전을 꺾어지고 나갈 2세들을 더 튼튼하게 먹여야 한다.

국민이 잘먹어야 경제 발전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포츠에 우리가 약하다는 것도 국민영양 수준과 관련이 없지 않다. 능동적인 국민체질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의 최고기과동을 계기로 축산 발전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촉구 한다.

不良食品 근절하여 健康社會 이룩하자